

교과서 수록 영상 콘텐츠의 선정 기준과 적절성 요건에 관한 연구*



김남석
부경대학교 교수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교과서 집필과 제작 시 부가 콘텐츠로 삽입되는 사진, 그림, 영상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 선정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일련의 기준 마련과 요건 충족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 실행 목표(세부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상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¹⁾

* 본 연구는 한국초등교육연구 제61호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 보완하여 게재된 것으로, 연극과 영화와 관련된 교과서 제작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 연구이다.

1) 기존의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되는 그림이나 자료, 심지어는 지도, 연표, 사료, 그래프 등을 일괄하여 '삽화'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의 삽화 대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영상언어의 비율을 고려하여 '영상 콘텐츠'로 통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상 콘텐츠는 전통적인 개념의 삽화뿐만 아니라, 만화, 사진, 영상, 동영상(CD), 홈페이지(링크),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용어상의 지칭을 통해 변모된 영상언어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대체 용어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삽입 콘텐츠를 전통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은 ‘삽화(插畵)’였으나, 동시대적 환경에서 과거의 삽화의 정의가 영상언어와 매체 개념을 지시하기에는 다소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삽입물을 영상 콘텐츠라는 명칭으로 재규정하고자 했으며, 자연스럽게 이 연구는 영상 콘텐츠의 수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성’과 함께, 교과서 수록 시 그 능률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아울러 겨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은 최근 교과서(편찬)에서 그 활용 범위와 사례가 확대일로에 있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록 요건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교과서 수록 내용의 맥락 변화 가능성을 상호 고려하여, 학습 대상인 학생들의 인지/정의 발달 과정에 적합한 교과별 수록 규준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년에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²⁾ 이 기준에 따르면, 삽화는 학습 효과와 심미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크기와 위치가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³⁾ 더구나 이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는 삽화에 관련된 검정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는데, 그 핵심은 삽화와 내용은 상호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기준은 나름대로 삽화(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참조 내용이 빈약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검정을 위한 기준 역시 모호하고 개략적이어서 이를 현실적인 심의 기준으로 삼기에도 부족함이 적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교육 현장(편찬 교과서와 그 활용)에서 영상이나 삽화의 배열과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그 활용 맥락의 최적화 가능성이 스스로 제약되기 일쑤이며, 심지어 이를 통해 학습 내용의 혼선과 방해가

2)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은 이후 2012년에 개정되었고, 2015년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으로 변화되었다.

3) 2011년 9월 발표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의 따르면, 「기타」 항목에서 “지면을 구성할 때는 학습의 효과와 심미적 측면을 고려하여 활자의 크기와 배치, 삽화·사진의 크기와 위치 등을 다양하게 한다”, “각종 문자 자료, 작품, 삽화, 사진 등 개인의 창작물을 인용, 발췌, 전제한 경우는 저작자와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고 그 효과를 밝히고 있다. 또한 검정기준에서는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의 항목에서 “13. 사진, 삽화, 통계, 도표,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신의 것으로서, 내용에 적합하며 출처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가?”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5년에 제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서도 이러한 기준과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2015년에는 ‘지도서의 구성 체제’에서 “사진, 삽화, 도표, 통계 자료 등은 해당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제시한다.”는 목표가 추가되어 있고, 기타 항목에서 ‘출처 표기의 명확함’과, ‘선명한 제시법’, ‘표기의 정확성’, ‘창의적 활용 여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생겨나기까지 하면서, 점차 영상 콘텐츠의 교과서 수록은 신중한 대처를 요구하는 문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교정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원칙적인 기준 마련과 적절성 정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의 집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기준을 보완 수정하고, 교육 정책과 현장 교육의 합의를 주선하여, 합의를 통해 마련된 기준을 집필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 힘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그 기준과 적절성 요건을 제안하는 성격의 연구로, 향후 전개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시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교과서 수록 기준 확립과 학습 능률성 제고 방안 모색

본 연구에서 시행하는 학술(문헌) 연구—교과용 도서를 중심으로 한 이론과 배경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논점으로 모아질 수 있다. 하나는 영상 콘텐츠의 교과서 수록 기준이다. 이러한 논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필히 ‘학생 발달 단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초등학교 교과서/중등학교 교과서/고등학교 교과서에 삽입되는 영상 콘텐츠의 위계와 성향이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계’와 ‘수위’ 그리고 ‘차이’를 반영하는 교과서 제작 방안과 현장 지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미 현실적인 필요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적절한 지침이나 해당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교과서 집필 시 삽화의 선택과 조율 과정은 실제로 난항을 겪기 일쑤였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상황(집필/제작/심의/학습의 전 측면에서)을 창출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빚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는 일찍부터 문제적 상황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은 뒤로 미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국어 교과서의 검인정 체제 도입은 일관된 수록 기준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2011년 도입 개정 교과서 체제 이후, 당분간 교과서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집중되었다.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편찬자들의 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배려하는 작금의 상태가 마련 유지되면서, 교과서 삽입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현장의 필요를 일거에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검인정 체제하에서 교과서 집필과 활용 방안(지침)이 어느 정도

정착된 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록 기준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현장 교육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유도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교과서 삽입 영상 콘텐츠의 수록 기준을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위계별 적절성’과 보편적 공공선과 도덕 기준을 반영한 ‘윤리상 적절성’의 측면에서 상정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영상 콘텐츠의 교과서 수록 시, 해당 내용과의 관련성을 통해 학습 능력과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이다. 영상 콘텐츠는 필연적으로 문자 텍스트와의 상호 교섭을 전제하고 있다. 교과서는 주로 문자언어를 통해 기술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아무래도 설명(해설)의 주축을 이루는 언어는 한글을 위시한 문자언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를 삽입하는 전제는 교과서 수록 내용을 보충 설명하거나 상세화하여 학습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학습자들이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자의 교수법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내용(학습 내용)에 접근(실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반응은 이와는 상반된다. 영상 콘텐츠는 오히려 교과서의 시각적 현란함을 강조하고 채택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잘못된 영상 콘텐츠로 인해 오류를 학습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출된 바 있다. 교과서 제작자(출판사) 측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자신들의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영상 콘텐츠에 공을 들이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내용상의 긴밀성이 떨어지는 폐해를 낳고 있다. 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가 아니라,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디자인으로서의 콘텐츠를 더욱 선호한다는 지적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⁴⁾

영상 콘텐츠의 수록은 분명한 목적과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에 문자로 기술되는 상황(대목)과, 문자 이외의 영상 콘텐츠로 기술되는 상황(대목)이 기본적으로는 서로 연관되고 상호 보완하여 해당 학습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학습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정해진 학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는 영상 콘텐츠의 수록이 내용상 적절성을 지녀야 하며, 그 수록 빈도와 비율상으로도 적절성을 지녀야 한다는 전제를 확인시킨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내용상 적절성’과 ‘분포상 적절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4) 박준용(2014). 검정 국어 교과서 삽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44. 한국어교육학회, 402~404.

표 1 — 영상 콘텐츠 수록 기준

고려 대상(기준)	세부 기준	목표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	위계상 적절성	수록 기준 마련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도덕률	윤리상 적절성	
학습 내용의 전달 효과	내용상 적절성	학습 능력 제고
교과서 체제의 조율 효과	분포상 적절성	

3. 적절성 요건 충족을 위한 기준의 필요성

앞에서 분류하여 제시한 네 가지 적절성—위계상 적절성, 윤리상 적절성, 내용상 적절성, 분포상 적절성—은 영상 콘텐츠 수록 기준에 해당한다. 우선, 위계적 적절성은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이러한 기준은 초·중·고 교과서의 편찬 과정에서 영상 콘텐츠의 수록 여부에 대한 참조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상 적절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공공성과 윤리성 함양이라는 원칙적인 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기준을 공통의 기준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명분을 숙지해야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기준과 고민은 참조와 숙고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상 적절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한 합의와 시행착오를 거쳐 마련된 등급제 심의 방안을 대폭 참조 수용할 예정이다.

가. 도덕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상 적절성’

이러한 적절성의 네 가지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 첫 번째인 ‘위계상 적절성’은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학교급과 연령)별 차이와 수준을 제시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초·중·고 학습자들은 그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도덕 발달 단계에 속하게 된다. 사실 그 차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세심한 관찰이 별도로 요구되겠지만, 도덕 발달 이론을 정리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가감하고 수정

보완한다면, 비교적 체계적인 수록상의 위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도덕 발달 단계로 정리하여 제시한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을 바탕으로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덕 발달 이론은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가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하던 시절(대학원생), 심리학자 피아제(Jean Piaget)의 심리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도덕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안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현재까지 교육학에서 인정하는 가장 영향력이 강한 이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본래 피아제는 도덕적 사고(moral reasoning)와 도덕성(morality)은 일정한 단계를 통해 발현되고 또 발전해 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성의 단계적 발달 개념을 도입한 콜버그는 도덕적 사고가 여섯 단계로 나타난다는 독창적 이론을 제창하게 된다. 콜버그는 개인들이 도덕적 딜레마에 처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를 통해 도덕 발달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하인즈 딜레마(Heinz dilemma) 같은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s)를 개발, 이를 피조사자에게 제시한 후 면접하는 방식으로 도덕 발달 수준을 측정하고자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도덕 발달의 단계는 인식작용(cognitive functioning)에 근거하고, 단계에 따른 발전은 한 방향(unidirectional)으로 나아가며, 발달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의(justice)에 대한 사고는 그 복잡성(complexity)이 증가하고 도덕적 시각의 폭이 더 확장된다(inclusive)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⁵⁾

이러한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초·중·고 학습자의 도덕 발달 단계를 자연스럽게 포괄하고 있어, 청소년기 학습자들의 인지와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3수준(level)과 6단계(stage)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영상물 등급 분류 기준을 응용한 ‘윤리상 적절성’

‘윤리상 적절성’은 교과서 수록 영상 콘텐츠의 도덕적 허용 범위를 제시하고 교과서 편찬 시 이를 분별하여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하겠다. 한국 사회에서 영상물(영상 콘텐츠)은 해당 콘텐츠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이를 사회 보호 계층인 청소년

5)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했다. 손흥철 외(2013). 발달과정으로 본 아동의 도덕의식함양. 온지논총, 34. 온지학회, 299-326; 문용린, 문미희(1993). 한국 청소년의 도덕판단력 발달 연구개관. 청소년학연구, 1(1). 한국청소년학회, 43-57;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원현주(2008). 한국인의 도덕판단력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심리연구, 22(1). 한국교육심리학회, 281-299; 문용린, 김민강, 엄채윤(2008). 한국판 도덕판단력 검사(KDIT). 교육심리연구, 22(4). 한국교육심리학회, 783-800

들에게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등급 분류 목적에 따라 분류된다. 현재 5등급의 분류 체계를 고수하고 있고, 해당 영상물을 각각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 위험의 측면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일곱 가지 심의 기준은 곧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제인가, 선정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폭력성의 표현 수위는 어떠한가, 대사가 얼마나 (불)건전한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약물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모방의 위험성이 잔존하는가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일곱 가지 기준을 교과서 삽입 영상 콘텐츠 수록 기준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정도를 가감하여 변용 수정할 예정이지만, 거시적 시각으로 볼 때 이러한 기준들을 교과서 영상 콘텐츠의 규준을 마련할 때의 유의점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상 적절성은 교과서에 삽입되는 영상 콘텐츠의 보편적 공공성과 윤리적 임계점을 밝히는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지만,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교과서 편찬 방식과 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효율적 측면도 결부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심의 기준을 벗어나는 효율성 제고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수-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내용상 적절성’

‘내용상 적절성’은 해당 학습 내용과의 유기적 연결과 상호 보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고 하겠다. 교과 내용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영상을 비롯한 각종 도안이나 삽화(그림, 사진) 등은 일찍부터 주요한 전달 도구로 주목받아 왔다. 그래서 미디어(매체) 교육은 그 자체로도 중요했지만, 교과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주요한 학습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는 달리, 영상 콘텐츠를 교과 내용으로 연결하여 그 연계 사항을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제한된 상황은 영상 콘텐츠를 부가적인 도구로만 활용하려는 목적이 우세하고,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전달 도구로 대체하려는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부여하고 있는 현 교육계의 인식에서 기인한다. 즉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전달 방식을 고전적이고 정통적인 방식으로 간주하는 교수자의 습관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매체를 활용하거나 영상언어를 선택하는 경우를 산발적이고 또 예외적인 사례로 간주하

는 편견이 깊숙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습관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한층 능률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영상 콘텐츠의 삽입은 관련 교과서의 내용을 해설하고 보충한다는 목표 외에, 학습자의 능률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아무래도 다양한 매체 환경에 노출된 채로 성장한 현재의 학습자는, 전통적인 문자 교육의 세대인 교수자(이전 세대)들보다, 현대화된 매체에 익숙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매체언어류의 교과서 기술 언어나 교수 체계는 학습 능률을 향상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한 교수-학습 방식의 간극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학습자의 교육 환경이 영상 매체에 비교적 강도 높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교수자들의 교수 입장이 기본 언어의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영상 콘텐츠의 삽입은 상대적으로 편리한 교과서 기술 체계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 없다. 또한 설령 학습자의 환경이 이러한 매체 노출 비중에서 앞선다고 해도, 교수자의 교육적 철학과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세부 조건을 무시할 수도 없다. 다만 매체 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력과 선호도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전제하에, 교수자와 교과서 집필자는 교수-학습 환경을 영상 콘텐츠의 활용 빈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시대적 당위성을 체감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교수자 편익에 의해 영상언어와 매체 환경을 임의로 축소 삭제해서는 안 되는 의무적인 소임도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자언어, 음성언어, 그리고 영상언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학습 내용의 전달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특정 기술 언어에 일방적으로 매몰되거나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안만큼은 분명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만들기/보기’ 영역의 학습 가능성을 감안한 ‘분포상 적절성’

‘분포상 적절성’은 교과서의 기술 체계와 조직 방식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하겠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문자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이다. 국어 교과서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기술되며, 영어 교과서는 영어를 중심으로 기술된다. 수학 교과서처럼 숫자가 중요한 표기 체계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과학 교과서처럼 도표와 그림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교과서들은 기본적으로는 특수한 형태의 표기 체계를 중요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라는 기본적인 언어의 의사소통 체계하에 구성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특수 문자, 각종 그림, 참조 사진, 관련 영상을 부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거시적으로 동일한 체계를 고수한다고 하겠다. 다만 부가되는 텍스트의 비중과 목적이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일 따름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주요 문자 체계와 이를 보완하는 영상 콘텐츠의 관련성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형성하며 교과 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자를 읽고 해독하는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 향상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어 능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과 과정에서 문자언어, 음성언어를 모두 학습하는 일은 의사소통의 균형과 다양성을 기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과목인 국어에서는 ‘음성언어의 표출(표현)’에 해당하는 ‘말하기’와 ‘음성언어의 수용(이해)’에 해당하는 ‘듣기’가 국어의 학습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문자언어의 표현’에 해당하는 ‘쓰기(짓기)’와 문자언어의 수용에 해당하는 ‘읽기’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 학습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 체계는 국어를 위시하여 교과 전반의 기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범교과적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영상언어의 ‘표출/수용’ 방식인 ‘보기/만들기’가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그 학습 대상과 교육적 활용 면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며 기본적인 학습 영역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⁶⁾ 국어에서는 한때 매체언어를 이러한 주요 학습 영역으로 다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현재에도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이 남아 있기는 하다), 실질적 학습 영역으로 정립하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오히려 애매한 형태의 성취기준으로 남겨 놓아,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악영향을 양산했다.

이러한 폐단은 현재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교과에도 잔존하고 있어, 미래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영상)만들기의 경우 ‘말하기’나 ‘읽기/쓰기’ 영역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한귀은(2006).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점검 및 교과서 개발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154-156 참조].

표 2 — 영상 콘텐츠 분포상 적절성의 조건

	표현의 영역 (자아의 내부에서 외부 세계로 표출)	이해의 영역 (외부의 세계에서 자아 내부로 수용)	시사점
음성언어	말하기	듣기	국어를 비롯한 주요 교과 학습 영역이자 교육 목표로 설정
문자언어	쓰기(짓기)	읽기	국어를 비롯한 주요 교과 학습 영역이자 교육 목표로 설정
영상언어	만들기	보기	국어를 비롯한 주요 교과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학습 영역으로 제시하지 못함

영상 콘텐츠는 이러한 영상언어—일반적으로 국어교육 현장에서는 ‘매체언어’로 지칭—의 학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영역이다. 영상 콘텐츠를 교과서에 삽입하는 작업이 흥미로운 선택이나 여가의 작업이 아니라, 교과서라는 체계를 통해 영상언어를 취택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유의미한 교육 활동인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언어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의미 있게 전달하는 활동은 교육적인 철학과 목표를 동시에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겠다.

마.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 교류의 장 마련

이러한 네 가지 적절성을 통한 기준 마련 연구는 일선 교사들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관련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조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계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 실패는 소수의 일방적인 의견이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변화 과정 자체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과의 의견 협력과 논점 교류는 필수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 교류는 세미나나 공청회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세미나는 본격적인 기준 마련 이전에 시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곧바로 기준 마련의 과정에 피드백되어야 한다. 일종의 사전 세미나 작업은 현장의 문제 인식을 추출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네 가지 적절성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현장 교육과의 유기적 소통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 세미나 격의 의견 교류의 장은 영상 콘텐츠의 교과서 삽입 기준을 둘러싼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수집하여 이를 적절성 기준과 효율성 제고 방안에서 논의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 교류의 기회는 학술적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 도출 이후에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성 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의 초안이 사전 세미나의 토대가 된다면, 세미나 이후 가시적으로 제시된 심의 혹은 제작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2차 세미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사전 세미나가 본격적인 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교사들이 생각하는 적절성의 기준을 청취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 현장과의 의견 교류는 그러한 문제 도출이 관련 연구에 대입된 결과를 점검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2차 세미나에서는 최초의 세미나 참석자들—일선 교사들—을 다시 초청하고 그들에게 최초의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된 연구 성과(1차 도출)를 공개한 이후, 그 변모 사항과 수정 보완점을 재문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장 교사들과 함께하는 세미나는 처음에는 의견 공유와 문제점 파악의 성격을 지니고, 나중에는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모색과 수정 의견 청취의 공청회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청회 성격의 세미나는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야별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계의 현장은 다양한 층위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라면, 두 번째는 교사와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담당 부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사들을 양성하고 지도하는 사대와 교대 관련 연구자(대학의 전공 교수)들도 이러한 층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영상 콘텐츠의 삽입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성을 기준으로 효율성 증대를 꾀하는 작업은 다양한 이견과 심각한 반론을 각오해야 한다. 심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러한 규준을 마련할 정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반응도 산출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준 마련이 곧 영상 콘텐츠의 제약이나 검열이 아니라, 교과서 체제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균형감을 상승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망각하지 않는 일이다. 영상 콘텐츠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교과서 교수-학습 체계의 정당한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가.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과 객관화 검사 방안

콜버그는 도덕적 사고와 발달의 진행 층위를 모두 ‘6단계(stage)’로 분류했고, 각각 2

개 단계를 묶어 하나의 ‘수준(level)’으로 파악하여 총 ‘3수준 6단계’로 정리한 바 있다. 1단계는 ‘복종(obedience)’ 단계이고 2단계는 ‘이기심(self-interest)’ 단계인데, 이 두 단계는 ‘도덕적 수준 1(level 1)’에 해당하며 ‘인습 이전 수준(Pre-Conventional)’ 혹은 ‘전도덕성 수준’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중시되는 도덕성의 기준은 처벌의 유무에서 확인된다. 이 수준에서는 처벌될 것이냐 아니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냐가 도덕성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해야 한다.

콜버그의 도덕적 ‘수준 2’는 ‘인습 수준(Conventional)’에 해당한다. 3단계 ‘사회 규범’의 순응(conformity)과 4단계 ‘법과 질서(law and order)’가 이 수준에 속한다. 처벌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었던 수준 1에서의 도덕성 유무가, 수준 2에서는 사회의 규범이나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차이를 보인다. 수준 2의 도덕성은 ‘타율적 도덕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도덕적 수준 3은 ‘인습 후기 수준(Post-Conventional)’에 해당하며, ‘자율적 도덕성’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5단계 ‘인권(human rights)’, 6단계 ‘보편적 인간 윤리(universal human ethics)’가 포함된다. 수준 3에서 도덕성의 판단 기준은 개인(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원칙에서 연원한다.⁷⁾

콜버그의 도덕 6단계와 3수준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콜버그는 1단계는 3~7세, 2단계는 8~11세, 제2 수준은 12~17세, 사회화 단계는 18~25세로 파악하고 있다.⁸⁾ 사실 이러한 연령별 단계와 수준의 제시는 편리하고 간결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간결하고 명확하지만 복잡한 인간 내면의 심리 구조나 사회 발달 환경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된다.⁹⁾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적지 않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¹⁰⁾

그럼에도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론)는 명징하게 구획되고 또 각종 측정 도구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객관화의 가능성이다. 초·중·고 교과서 편제에서 객관적 지표는 도덕성의 가시

7) 손흥철 외, 앞의 논문, 305-307 참조; 정소흔(2007). 콜버그 『도덕발달의 철학』에서 정의의 문제. 동서사상.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125-129.

8) 손흥철 외(2013). 앞의 논문, 306 참조.

9) 김상현 외(1996). 롤즈와 콜버그의 도덕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초등도덕교육, 1.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149-173 참조.

10) Gilligan 같은 학자는 남성 편향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적 기술 범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더구나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론은 그 자체로 초·중·고 학생의 연령대와 대체로 일치하며, 인지 발달 단계의 계층 차를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기준을 강제적인 수단에서 찾는 경우(처벌의 유무/전도덕성 수준)에서 타인과 집단의 기준에서 찾는 경우(사회의 규범과 기대/타율적 도덕성 수준)로, 나아가서는 자신의 내면적 조건에서 찾는 경우(자신의 원칙/자율적 도덕성 수준)로 진행되며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위계와 발달상을 취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콜버그의 이론에서 수준과 단계의 상승은 곧 인간적 도덕률에 대한 제고와 이해의 확장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주목해야 할 점은 콜버그의 이론 그 자체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콜버그의 이론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모색이다. 많은 새로운 연구자들이 이러한 도덕 발달 단계를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유용한 도구(검사 방법)를 개발하고자 했다.¹¹⁾ 도구의 결과 중에서 1974년에 개발된 DIT1(Defining Issues Test)은 최초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이후 Rest et al.은 이후 DIT1을 개량하여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DIT2를 발표했다. 이것은 최초 DIT1의 딜레마와 점수화 방식과 진술문 항목 그리고 일관성 없이 응답하는 인물들을 배제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다. 문용린은 이러한 DIT1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안한 인물인데, 그 이후에도 시대와 사회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문을 개선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¹²⁾

콜버그의 이론과 객관화의 가능성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검사 장치의 개발은, 교과서의 위계를 고려하여 이에 따른 도덕적 발달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외부적 조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를 활용하면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영상 콘텐츠의 삽입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은 콜버그의 이론 자체를 교과서 체계에 도용하자는 의견이기보다는, 콜버그의 단계 수준 형식과 이를 객관화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한국의 교육 현실과 교과서의 상황에 맞게 변형 혹은 가감하는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에 가깝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학습)위계의 소멸’이었다. 이러한 위계의 소멸은 성취기준의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교과 내용상의 혼란

11) 정소훈(2007). 앞의 논문, 123-125.

12)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원현주. 앞의 논문, 286; 문용린, 김민강, 엄채윤. 앞의 논문, 784.

을 가증시켰다. 중 1 과정에서 읽혀야 하는 제재가 고등학교에서도, 혹은 초등학교에서도 수록될 수 있는 현재의 현실이 이를 분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제재의 혼란을 난이도 조절을 통해 해결한다고 해도, 제재 혹은 영상 콘텐츠가 지닌 도덕적 범주의 혼란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운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 과정상에서 이를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 실행 방안으로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상 콘텐츠 삽입 기준을 도덕적 발달 단계에 의거하여 책정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격차를 인정하여 위계상 적절성에 의거한 수록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생성된 결론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된 의견 접근이기도 하다.

나. 영상물 등급 분류 방안을 통한 공공적 도덕률 확립

영상물 등급 분류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보고서나 논문은 상당수에 달한다. 영상물 등급제도가 위험적 요소를 지닌 정책이라는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¹³⁾ 이러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이유는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조건의 연령층을 선도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보고서는 공공연하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학교에서의 영상물 이용 교육의 경우, 청소년 영상물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학령별로 단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하며, 미디어 교육의 정기적 시행을 위해 미디어 교육을 제도적으로 정규 과목에 포함시키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¹⁴⁾

영상물 이용이 곧 매체 교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주장을 참조하면 ‘미디어 교육의 정기적 시행’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주장에는 영상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학령별 단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영상물이 아닌 영상 콘텐츠로 바꾼다고 해도 대동소이하게 적

13) 양영철(2001).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등급 분류 제도의 위헌성에 관하여. 영화연구, 16. 한국영화학회, 351-371 참조; 신순철(2003). 현행 영화등급분류제도의 위헌 요소와 대안. 한국언론학보, 47(4). 한국언론학회, 274-292 참조.

14) 영상물등급위원회(2013). 영상물 등급분류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 최종 보고서, 2.

용될 수 있다. 즉 교과서 삽입 영상 콘텐츠 역시 미디어 교육과 병행 실시되어야 하고—그러니까 만들기/보기 영역의 독립적 특화가 필요하고—학년급에 따른 수준별 편차를 담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연령과 학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윤리성이라는 공통적 목표는 전혀 소멸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즉 영상 콘텐츠의 교과서 수록과 실제 학습 시 청소년들의 정신·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의무가 부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공성의 실현이고 윤리성의 고수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원칙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공공성과 윤리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 위험’의 세부 지표와 위험 가능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세부 지표와 위험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진행시킨 정책으로 영상물 등급 분류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영상물 등급 분류 방안은 오랜 노하우를 쌓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대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영상 콘텐츠 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원칙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령 별 위계와 분할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공선을 실현해야 한다는 명분과 목표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도덕률을 따라야 하는 고통도 뒤따른다. 그럼에도 윤리적 항상성은 삽입 영상 콘텐츠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교과서에 삽입 수록되는 영상 콘텐츠는 그 자체로 연령별 위계를 적용받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 단계 혹은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콜버그는 개략적인 도덕 단계와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정립한 바 있다. 동시에 이러한 수준 차를 인정하면서도, 전 학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저해 요소에 대한 공적인 도덕률—보편적이고 공공적인 도덕률의 적용도 필요하다.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준,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기준이 조화롭게 조율될 때 수록 기준으로서의 ‘위계상 적절성’과 ‘윤리적 적절성’이 공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 마련은 보다 정치한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연구자들의 전문적인 논의와 토론을 요하는 작업이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 전제할 필요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5. 수록 기준과 적절성 요건을 통해 본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교과서 집필은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만큼 장기적인 시일을 요하고,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과서 집필과 활용 정책은 근시안적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당위적 표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교육 정책은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교과서 삽입 영상 콘텐츠의 적절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과 요건 제안은 단시간에 처리될 문제는 아니다. 영상 콘텐츠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현실적인 기준으로 수용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졸속 정책으로 인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단시간에 그 효과를 보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뜻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론을 통해 향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일련의 대안을 구상 제시하고자 했다.

원칙적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고 편찬하는 과정에서 영상 콘텐츠의 수록 기준과 효율성 제고 방안은 계속 논의되고 실험되어야 한다. 규제가 일방적 검열이나 폭력적 통제가 아니라 지침이나 기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폐단 역시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하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부정적 해악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검인정 체제 하에서 집필자 측의 개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그 편찬 기준을 전향했다. 집필 제작과 관련된 규제는 최소한으로 적용하고, 심의 역시 공통의 주요 사안에 국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선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에 수록되는 주요 표기 수단이자 학습 기호인 영상언어와 매체언어 그리고 그 해당 영역에 폭넓게 관련된 영상 콘텐츠의 수록 방식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다소의 문제 제기와 함께 부정적 폐단 역시 예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교과서 삽입 영상 콘텐츠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와 적절한 참조 기준은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과서 집필자들이 느끼는 혼란, 교육 현장에서의

요구, 학습자의 학습 능력 향상, 교육 정책의 기초 건립 그리고 만들기/보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학습 영역의 비중 증대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와 폐단 사이에서 교육정책은 혼란을 극소화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제안)를 통해, 교육 일선과 정책 담당 부서 그리고 교육적 환경하에서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도 수록 기준과 적절성 요건에 대해 논의를 구상 발의하는 작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교육 여건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서에 수록되는 영상 콘텐츠의 단순 규제 논의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교육적 시야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삽입 영상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이와 관계되는 매체 교육이나 영상 언어 분야, 나아가 미디어 학습 전반에 걸친 주요한 연구·교육 시사점(대안)을 제시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시사점 제시는 학습 영역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매체 교육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공인되었고, 또 그 방안이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각 교과 분야에 침투한 지 오래이지만, 범교과적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 개별 교과가 아닌 범교과적 차원에서의 미디어와 영상 콘텐츠에 대한 학습 능력 제고는 현재 체제로는 그 해당 분야가 애매하고 다소 소외되었던 매체 교육의 문제를 함께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서 수록 영상 콘텐츠의 선정 기준과 적절성 요건에 대한 탐색(의견 제시)은 좁게는 교과서의 기술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연구로 보일 수 있지만, 개별 교과를 넘어 범교과(서)적인 측면에서의 매체 교육과 해당 영상 콘텐츠 학습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 방식의 개선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라도 교과서 수록 영상 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과서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처럼 그림 위주의 삽화가 아닌, 최신 매체나 영상 콘텐츠를 통한 영상언어의 반영 비율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 추세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상언어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과서 수록 '영상 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향후 심도 있게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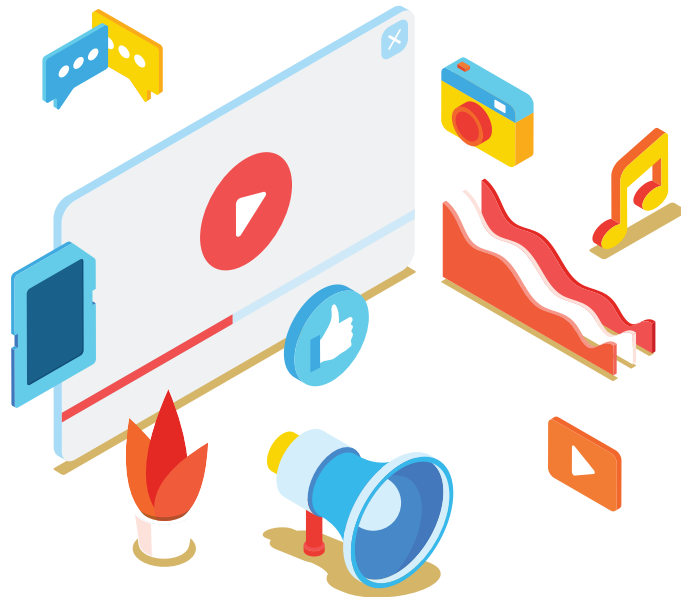
특히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영상 콘텐츠를 장식적인 효과를 강조하거나 강렬한 시각

적 효과를 북돋우는 데 활용하는 등의 부수적 목적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검정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출판사들은 검정을 통과하거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화려한 장식으로서의 삽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¹⁵⁾

미래의 연구 정책은 치장이나 유혹으로서의 삽화가 아니라, 첨단 이미지와 새로운 교육 개념 그리고 의미 있는 자료로서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로 인해 우수한 교과서가 각광받을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의 올바른 인식을 확산 심화하는 작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의 논리(검정 통과와 점유 비율을 좌우하는 수단으로서의 영상 콘텐츠) 역시 참조할 바가 적지 않지만, 그로 인해 본질이 왜곡되거나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기준 마련 역시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필자 소개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2년 고려대학교에 입학했고 그 이후 연극과 영화에 관심을 가졌다.



15) 박준용(2014). 앞의 논문, 402-404.